

지역경제 역동성 제고와 인구감소지역 부활을 위해 중앙·지방 지혜 모은다.

- 지자체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지방 거점지역 육성, 인구감소지역 부활, 건설투자 활성화 등 지역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
- '24.3월 중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제1호 프로젝트 군(群) 선정
-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민간 배달앱 배달료 신규지원(30억원)
-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선급 지급 한도 100%로 확대

기획재정부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1.25.(목) 13:50 정부서울청사에서 「2024년 시도 경제협의회」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역동성 제고와 인구감소지역 부활을 위한 정부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중앙과 지방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.

< 시도 경제협의회 개요 >

- 일시 : '24.1.25.(목), 13:50~15:10
- 장소 : 서울청사(19층 대회의실)
- 참석자 : (기재부) 1차관(주재), 정책조정국장 등
(지자체) 전국 시도 부단체장
(관계기관) 교육·행안·복지·고용·국토·해양·중기부 및 지방시대위원회

김 차관은 정부 정책이 지역 현장 구석구석으로 빠르게 확산되기 위해서는 정책일선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, 지방 거점지역 육성, 인구감소지역 부활, 건설투자 활성화 등 지역정책과제를 지자체가 자율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당부하였다.

특히, 정부는 현재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인 인구소멸과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내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1월 중 출범하고,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공급을 위해 올해 3천억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등 건설투자 활성화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.

또한, 중앙과 지방이 합심하여 상반기 지방공공요금 동결 기조 등 민생과 밀접한 품목 중심으로 지방물가 안정관리 방안을 논의하였으며, 각 지자체는 규제개선 우수사례를 발표하여 다른 지자체에 공유하였다.

끝으로, 김 차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에 칸막이 없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문제해결형 정부로 거듭나기를 당부하였다.

담당 부서	기획재정부 지역경제정책과	책임자	과 장	윤수현 (044-215-4570)
		담당자	사무관	정민형 (chongnyon@korea.kr)



이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하여 사전에 배포해 드리는 자료입니다.
실제 발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실제 발언을 반드시 확인하시고
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【 인사 말씀 】

- 반갑습니다. 기획재정부 1차관 김병환입니다.
 -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시·도 부단체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.
- 지난해 연말까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지자체에서 다함께 재정집행에 힘써 주신 덕분에 작년 GDP성장률이 정부가 당초 전망한 1.4%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.
- 올해는 성장률 등 경제지표가 지난해 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수와 지방경기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
 -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을 '활력있는 민생경제' 구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입니다.
 - 지역 경제의 역동성이 제고되어 경제 회복의 온기가 민생 현장 구석구석으로 빠르게 확산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
 - 오늘 개최하는 시도경제협의회가 올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하여 중앙과 지방이 지혜를 모으고 협력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.

【 2024 경제정책방향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요내용 】

-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의 주요과제인
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거점지역 육성, 인구감소지역 부활,
건설투자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.
- 거점지역 육성을 위해,
작년 10월 마련된 '4+3 초광역권* 발전계획'을 토대로
올해 3월까지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.
 - * 4대 초광역권(충청권, 광주·전남권, 대구·경북권, 부울경)
3대 특별자치권(강원권, 전북권, 제주권)
- 지난해 '글로벌 혁신 특구'로 선정된
부산, 강원, 충북, 전남 등 4곳을 본격 조성하는 한편,
금년 중 3곳을 신규로 추가 지정하겠습니다.
-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
세컨드홈 활성화, 관광 인프라 조성, 정주인구 확대 등
「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」를 마련하였으며,
 - 지방시대위원회 내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특별위원회를
구성('24.1월)하여 세부 사항을 논의·검토할 예정입니다.
- 건설투자 촉진을 위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
올해 총 3천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고,
3월 중 첫 프로젝트를 선정하겠습니다.
 - 도로·철도 등 건설 사업에 대한 선급 지급한도를
100%까지 확대*하고, 올해 상반기에 중앙 65%,
지방은 60% 집중 집행하여 공공부문이 건설경기 회복의
마중물이 되겠습니다.
- * 계약금액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100으로 선급 지급한도를 확대하는
계약특례 추진(「국고금 관리법 시행령」 입법예고, 1.15일)

【 2024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계획 및 협조사항 】

□ 민생회복을 위해서는 물가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올해 상반기 중 2%대 물가 조기 달성을 위해서도 중앙과 지방이 적극 협력하겠습니다.

- ① 먼저, 상반기 지방공공요금을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교세, 균특회계 등 인센티브 지원을 계속하겠습니다.
- ② 금년 착한가격업소를 7천여개에서 1만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 배달앱 배달료를 신규 지원(30억원)하겠습니다.
- ③ 아울러, 설을 앞두고 중앙-지방이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바가지요금, 섞어팔기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집중 관리·단속해나갈 방침입니다.

【 지자체 건의과제 조치결과 및 규제개선 사례 】

□ 오늘 회의에서는 지자체 건의과제와 각 지자체가 발표하는 규제개선 우수사례도 논의됩니다.

- 오늘 시도경제협의회가 중앙과 지방이 칸막이 없이 현장의 문제, 민생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.
감사합니다. <끝>